

〈제 761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광주경찰청에 사회적약자 지원 성금 1천만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신속 발견을 위해 광주경찰청,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협약체결과 함께 사회적약자 지원 성금 1천만원을 광주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실종 우려가 있는 지역 거주 환자 300명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 및 관리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배회감지기 구입 및 유지 비용에 힘을 보태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급 대상자 선정과 기기 보급 및 관리, 광주경찰은 지급된 배회감지기를 활용해 실종 환자의 수색 및 발견에 힘쓰기로 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침으로써 지역 곳곳에 나눔 문화를 전파하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성 청소년 위한 2천만원 상당 위생용품 ‘핑크박스’ 전달식 가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김현희 광주은행 여직원모임 개나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핑크박스 with 광주은행’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지역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100명에게 총 2천만원 상당의 ‘핑크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생용품 구입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매년 임직원들과 함께 ‘핑크박스 with 광주은행’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을 얻어 각고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멋진 학창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지역작가 작품전 김넷과 협력작가 7명 참여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홍보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망 작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작가들은 광주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인 '김넷과' 협력 작가들로, 회화와 조형물 등 다양한 분야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을 알리고 작품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미술품을 이용한 실내장식 수요가 증가한 만큼 많은 예술 애호가의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

◆ 지역 중소기업 ESG 인식제고 및 지역사회 대응전략 모색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광주지속협) 등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 ESG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기업들의 ESG대응 방안 모색 등 최근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기관장들은 “광주는 전국 최초로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선제적으로 ESG 경영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탄소 중립 달성 등 중소기업 부담이 큰 E부분은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S와 G 부분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ESG 경영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2회차 광주학생 안전짱 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단장 양정열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14일 기아오토랜드 광주사업장 내 홍보관에서 안전문화 정착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릴레이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주)청광솔루션 대표, 관리감독자 등 근로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안전보건공단 광주 광역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되었다.

안전보건공단 김무영 광주광역본부장은 “한 해동안 릴레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모기업과 협력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내년에도 많은 사업장이 자율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전남대학교 병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심사 ‘적합’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안영근 병원장은 “직원, 내원고객 등 병원의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병원 의료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수·간호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잇따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2023년 학대 피해아동 의료·심리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자문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업성과 점검,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새싹지킴이병원을 대상으로 우수기관·사례를 매년 선정해 오고 있다.

안영근 병원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며 “학대피해아동이 신체적·심리적 회복 과정을 거쳐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전KPS

◆‘경영혁신&신성장동력 창출’ 비전 달성 다짐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 한전KPS(대표 김홍연)가 경영 혁신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전력그룹사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전사적 역량 결집에 나섰다.

한전KPS는 불요불급 경상경비 집행 최소화 등을 통해 지난 2022년 545억원을 절감한 데 이어 올해도 안전 및 공기준수와 무관한 경상경비를 추가로 절감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총 3천122억원 규모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국내외 노후 발전설비 성능개선, 원전 해체 등 원전특화사업, LNG 기술 자립화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라며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과 전사적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비전2030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풀뿌리 복지 ‘나눔미(味)’ 사업으로 지역과 나눈다



밭·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 한전KPS(대표 김홍연)가 전국 사업망, 복지시설들과 함께 ‘풀뿌리 복지망’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한전KPS의 나눔은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혜 대상인 농가에서도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전KPS는 17일 “지역에서 생산된 쌀·농작물을 구매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한전KPS 나눔미

(味)’ 사업을 통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62개 사업소에서 8700만원 상당의 지역농산물을 구매해 1500여 세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특히 기업의 사회 가치 실현 활동은 필수”라며 “그린에너지와 함께 사랑받는 지속성장 기업이라는 한전KPS 슬로건을 널리 실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 ‘10차 ESG위원회’ 개최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17일 제10차 ESG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회사의 ESG경영인증 현황, 탄소 중립(Net-Zero) 추진 실적, 내부수익률(IRR)과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운영, 사회공헌 활동 추진실적·활동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해양에너지는 ESG활동을 통한 기업혁신활

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30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에서 대한경영학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1. 경제 동향

◆ 경총, 2023년 제2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12.7)

- 한국경영자총협회, 12.7(목)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제2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 ※ 「ESG 경영위원회*」는 정부 및 주요 이해관계자와 정책 소통을 위해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정기개최되며, 산하에는 각사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ESG 실무위원회가 분기마다 구체적인 ESG 경영실천방안을 협의하고 있음.
 - *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그룹 18개사 대표이사 사장단이 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참여그룹의 국내 계열사만 1,126개사에 이르는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구조 확립을 선언하며 2021.4.26 출범
- 이번 「ESG 경영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ESG 공시 활성화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산업계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
- 손경식 경총 회장(위원장)은 개회사에서 “ESG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는 데 기업과 정부가 따로일 수 없다”며, “충분한 검증을 거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 현실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공시기준과 항목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
- 손 회장은 현재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마련 중인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제시한 ESG 공시기준은 각국의 다양한 사정이 반영되는 관계로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기 마련”이라며, “국내 기준은 이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기업의 우려와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
- 최근 금융위가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손 회장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 그러면서 손 회장은 “ESG 공시 의무화는 개도국 상황도 함께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
- *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공급망이 주로 개도국에 위치한 상황에서 당장 신뢰성이 담보된 ESG 연결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Ⅲ. 노동경제동향

- 이날 기업들과 현장 소통에 나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요그룹의 ESG 공시준비 상황을 경청하고, 기업의 ESG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힘.
- 김 부위원장은 “EU와 미국 등의 ESG 공시 규제 강화로 대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우리 중소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 국내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고,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위원들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과제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중견·중소기업 배출량 공개 전용 플랫폼 조기 구축을 비롯해 △ESG 검·인증 시장 육성 등 공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
- 이외 △공시 대상이 되는 ‘연결 기준’의 명확한 개념 정립, △공신력 있는 기관의 ESG 공시 기술지원 창구 개설,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대응을 위한 통합적 기업지원체계 마련 등도 건의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ESG 경영위원회에 소속된 18개 그룹의 국내 계열사만 1,126개사에 이른다”며, “많은 기업들이 직·간접 영향을 받는 만큼, 우선 내년 1분기에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이 제시되면 충분한 시험과 검증을 통해 안정적 제도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 경총,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결과 발표

- ① (안전보건 업무 수행자)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Ⅲ. 노동경제동향

② (정부 컨설팅 지원)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해석됨

③ (중처법 이행 준비 상태) 응답 기업의 94%는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7%는 법 적용('24.1.27) 전까지 준비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④ (법 준수 어려운 이유)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이는 전문인력 도움 없이 중처법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임

⑤ (준비가 어려운 의무사항) 중처법 의무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 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이러한 결과는 현행 중처법이 기업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제정되어 대기업도 애로를 겪었던 수많은 매뉴얼과 절차서 작성 의무를 소규모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됨

⑥ (지원 필요 사항) 중처법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 을 가장 많이 선택했음

- 기업들은 서류 준비 등의 형식적 컨설팅보다, 매뉴얼 보급, 전문 인력 지원과 같은 현장 안전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됨

◆ 경총, 「최근 경제 상황 주요 현안」 경제전문가 조사 결과 발표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12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또한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에 환율

Ⅲ. 노동경제동향

(63.5%)과 물가(72.1%)가 안정화될 것이란 응답이 많았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 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시행(조사기간 : 11.20~12.2)

① **(우리 경제 성장 전망)**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동안 1~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침.

② **(경제 상황 원인)**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하여 응답자의 50.5%는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변

※ 그 다음으로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이 23.8%였고,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는 19.4%, ‘기업의 혁신 부족’은 6.3%로 나타남.

③ **(환율 안정 시기)** 최근 1,300원 수준으로 높아진 환율(원/달러)이 기존 변동 범위(1,050원~1,250원) 안에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고,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응답은 2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④ **(기준금리)** 응답자의 61.1%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 또한 “가계부채 관리, 자본유출 방지, 고물가 억제 등이 더 시급하므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 “소비 촉진,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과 성장 제고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로 집계.

⑤ **(법인세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24%, 중앙정부 기준)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음. 다만, 전문가 중 29.7%는 ‘중장기적 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現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⑥ **(상속세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Ⅲ. 노동경제동향

응답이 70.6%*로 나타난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 해야 한다는 응답은 17.1%, '인상' 해야 한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

*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33.2% +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37.4%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발표 (12.12)

○ 2023년 3분기 외감기업*의 성장성이 하락하고 수익성도 둔화되었으나 안정성은 개선

* 22,962개(제조업 11,604개 + 비제조업 11,358개)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 **(성장성)** 2023년 3분기 매출액증가율은 $\Delta 5.2\%$ (전년동기대비 기준)로 2023년 2분기($\Delta 4.3\%$)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되었고, 2023년 3분기 총자산증가율은 2.1% (전기말대비기준)로 2022년 3분기(2.8%)보다 증가 폭이 $0.7\%p$ 축소.

- **(수익성)** 2023년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0% 로 2022년 3분기(4.8%)보다 $0.8\%p$ 하락했고, 2023년 3분기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5.1% 로 2022년 3분기(5.0%)보다 $0.1\%p$ 상승

- **(안정성)** 2023년 3분기말 부채비율*은 90.2% 로 2023년 2분기말(90.8%)에 비해 $0.6\%p$ 하락했고, 2023년 3분기 차입금의존도**는 25.9% 로 2023년 2분기(26.0%) 대비 $0.1\%p$ 하락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100

**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회사채)/총자산]×100

○ 매출액증가율은 기업규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락 폭이 확대되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하락 폭이 소폭 축소되었고, 비제조업의 하락 폭은 확대

- 2023년3분기대기업매출액증가율의하락폭이확대('23년2분기 $\Delta 4.8\%$ →'23년3분기 $\Delta 5.8\%$)되었고,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도 하락폭이 확대('23년2분기 $\Delta 2.0\%$ →'23년3분기 $\Delta 2.7\%$)

Ⅲ. 노동경제동향

- 2023년 3분기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하락 폭이 소폭 축소('23년 2분기 $\Delta 6.9\%$ → '23년 2분기 $\Delta(6.8\%)$ 됐고, 비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하락폭이 확대('23년2분기 $\Delta 0.7\%$ → '23년3분기 $\Delta 3.1\%$)

◆ 통계청, 「2023년 11월 고용동향」 발표 (12.13)

- 2023년 11월 취업자는 2,86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7천명(1.0%) 증가
 - ※ 취업자는 2021년 3월(31만 4천명) 이후 33개월 연속 증가
- **(산업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 5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 9천명), 정보통신업(5만 4천명) 등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교육서비스업($\Delta 5$ 만 7천명), 부동산업($\Delta 3$ 만명), 제조업($\Delta 1$ 만 1천명) 등 취업자는 감소
- **(연령별)** 60세이상(29만1천명), 50대(3만 6천명), 30대(8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Delta 4$ 만 4천명), 40대($\Delta 6$ 만 2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
- 고용률(15세 이상)은 63.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실업자는 6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1.7%) 증가
 - 실업률은 2.3%로 전년동월과 동일했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5.3%로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
- 전체 체감실업률*은 8.3%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15.5%로 전년동월대비 1.8%p 하락
 - *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개념
-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명($\Delta 0.8\%$) 감소했고, 이중 취업 준비자는 6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8천명($\Delta 8.0\%$) 감소
 -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8천명 감소한 224만 1천명을 기록했고, 구직단념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 6천명 감소한 36만 4천명 기록

Ⅲ. 노동경제동향

◆ 한국은행, 「2023년 10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2.8)

- 2023년 10월 경상수지는 6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2년 10월(16.3억달러) 대비 흑자 폭이 51.7억 달러 확대
 - ※ 경상수지는 2023년 5월(19.3억달러 흑자)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2023년 10월 흑자 규모(68.0억달러)는 2021년 10월(79억달러 흑자) 이후 2년 만에 최대치 기록.
 -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한국은행) : 58.7('23.6)→ 37.4(7)→ 49.8(8)→ 54.2(9)→ 68.0(10)
 - ※ 2023년 1~10월 누적 경상수지는 23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3년 1~10월 누적 경상수지 (273.8억 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40.1억 달러 감소
 - 상품수지는 53.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2년 10월 9.5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 상품수지는 2023년 4월(5.8억달러 흑자) 이후 7개월 연속 흑자 기록
 - 서비스수지는 12.5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1.5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
 - ※ 서비스수지는 2022년 5월(1.5억달러 적자) 이후 18개월 연속 적자 기록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27.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26.8억달러 흑자)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
 - 이전소득수지는 0.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2022년 10월 0.5억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 2023년 10월 금융계정은 83.7억달러 순자산 증가 기록

◆ 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 (12.13)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리나라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1.3%, 2024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

Ⅲ. 노동경제동향

- ADB는 수출 회복 등 상방요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난 9월 전망대로 2023년 1.3%, 2024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국제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과 함께 근원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며 2023년 3.6%, 2024년 2.5%로 전망*
 - * '23.9월 전망치 대비 2023년은 0.3%p 상향 조정, 2024년도 0.3%p 상향 조정됨.
- 한편, 아시아 46개* 개도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내수회복과 서비스업 강세, 제조업 회복,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 상향조정에 힘입어 지난 9월 전망치 대비 0.2%p 상향 조정한 4.9%로 전망했고, 2024년은 4.8%로 지난 9월 전망치를 유지
 - * ADB의 경제전망은 49개 아시아 역내 국가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
-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2023년 3.5%로 지난 9월 전망(3.6%) 대비 0.1%p 하향조정했고, 2024년은 3.6%로 지난 9월 전망치(3.5%) 대비 0.1%p 상향조정함.

◆ 통계청, 「2022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발표 (12.12)

- 2022년 광업·제조업(10인 이상) 사업체 수는 7만 3,595개로 전년대비 731개 증가했고, 종사자수는 299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4만 3천명 증가
 - (업종별 사업체 수) 기타운송장비 176개, 식료품 170개, 금속가공 103개 등에서 증가했고, 섬유제품 177개, 가구 33개 등은 감소
 - (업종별 종사자 수) 식료품 7.8천명, 기타운송장비 7.5천명, 자동차 6.8천명 등은 증가했으며, 고무·플라스틱 4.6천명, 섬유제품 2.7천명 등에서는 감소
- 광업·제조업(10인 이상) 출하액은 2,044.2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75.2조원 증가, 부가가치는 726.5조원으로 전년대비 82.8조원 증가
 - (업종별 출하액) 석유정제 75.7조원, 자동차 34.4조원, 전기장비 33.0조원, 화학제품 31.0조원 등은 대폭 증가했고, 섬유제품 0.9조원, 가구 0.1조원 등은 소폭 증가

Ⅲ. 노동경제동향

- (업종별 부가가치) 석유정제 34.6조원, 전기장비 12.2조원, 자동차 10.0조원 등에서는 증가했고, 가구 0.2조원, 기타운송장비 0.2조원 등은 감소

- 사업체당 출하액은 278억원으로 전년대비 35억원 증가했고, 사업체당 부가가치도 99억으로 전년대비 10억원 증가

◆ 한국은행, 「2023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12.13)

- 2023년 11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3.2% 하락(전년동월대비 7.2% 하락)

※ 수출물가는 2023년 7월(0.1%) 이후 4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했으나, 2023년 11월 하락 전환

▶ 최근 수출물가 상승률 추이(% , 전월대비) : 0.1('23.7)→ 4.2(8)→ 1.8(9)→ 0.5(10)→ 0.5(11)

* 원/달러 평균환율(원) : 1,329.47('23.9월)→ 1,350.69('23.10월) [전월대비 1.6% 상승]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0.7% 상승(전년동월대비 13.3% 하락)

-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2% 하락(전년동월대비 7.2% 하락)

- 2023년 11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4.1% 하락(전년동월대비 8.5% 하락)

* 두바이유(월평균, 달러/bbl) : 89.75('23.10월)→ 83.55('23.11월) [전월대비 6.9% 하락]

※ 수입물가는 2023년 7월(0.2%) 이후 4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했으나, 2023년 11월 하락 전환

▶ 최근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 전월대비) : 0.2('23.7)→ 4.2(8)→ 3.0(9)→ 0.9(10)→ △4.1(11)

- (원재료)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6.6% 하락(전년동월대비 12.9% 하락)

- (중간재)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3.1% 하락(전년동월대비 7.6% 하락)

- (자본재 및 소비재) 자본재는 전월대비 2.2% 하락했고, 소비재는 전월대비 1.9% 하락 (자본재 전년동월대비 2.2% 하락, 소비재 3.7% 하락)

2. 노사 동향

◆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가운데 논의 의제 지속 협의 전망

-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등 주요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 재차 피력
 - 고용부 이성희 차관은 12. 11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에서 ▲노동규범 현대화,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힘.
 - 특히,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시 노사의 참여 없이 진행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반면, 한국노총은 12. 1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입장 표명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정책 관철 통로로 활용할지 성공할수 없을 것이며, 직접적 이해가 충돌하는 의제보다 산업전환 등 긴급한 의제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발언
- 경사노위는 12. 14 「노사정 대표자회의(12. 14)」 개최
 - ※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자 : 경총 손경식 회장, 고용부 이정식 장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 노사정은 이 날 대표자 회의에서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본회의 개최 및 의제별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의견 접근
- 한편,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를 규정한 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 노조법 개정안이 12.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사노위는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 논의 준비 개시

Ⅲ. 노동경제동향

※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①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임원, ②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③ 노동 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

○ 다만,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이 나누어져 있어 근로자위원 구성 난항 예상

※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 현황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11만3천여명),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7만5천여명),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13만6천여명)

-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는 12. 13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 위원회 참여 보장 및 의견수렴 요구

◆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12. 8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필요(헌법 제53조 제4항)

※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표결 결과 :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

○ 그러나 야당이 노조법 개정안 부결에 반발하며 21대 국회 내 재발의 추진을 시사함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야당은 올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최종 폐기된 양곡법, 간호법에 대해 재발의 진행

○ 이에 여당 윤재옥 원내대표는 12. 11「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쳐 최종 부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많은 갈등을 모아 다시 한번 터뜨려 사회 마비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라고 지적

○ 반면,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의 재이슈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12. 5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을 계기로 노조법 개정안이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하겠다고 발언

Ⅲ. 노동경제동향

- 민주노총은 12. 8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 내용을 원칙적으로 강화하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 표명

◆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을 통한 노동개혁 추진 경과 점검

- 정부가 노사법치 기반의 노동개혁을 추진중인 가운데 고용부는 12. 11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감독 강화 등 노사법치 확립을 통한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 고용부는 올해 ①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②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법치 확립 추진으로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감소했다고 강조
- 또한, 고용부는 12. 11부터 내년 1월말까지 정보통신업, 전문 연구개발업, 등 청년근로자가 많은 신산업 분야에서 60여개사를 선정해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

◆ 여야가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개시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 여론 확산

-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입법을 추진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는 12. 12 각각 선정한 1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
 -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예정
 - ※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의 우선 처리 목표 법안 논의를 위해 '2+2 협의체'(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 구성
 - 여당은 우선 처리 목표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을 제시한 반면 야당은 ▲양곡관리법,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법 등을 제시
 - 여야는 이 날 회의에서 제시된 법안 상당수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여왔던 만큼 법안처리를 위한 협상 난항 예상
- 한편, 경총은 12. 10 「상시근로자 50인(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실태조사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미만 1,053개 기업

Ⅲ. 노동경제동향

※ 실태조사 기간 : 2023. 11. 14 ~ 11. 22

구분	주요 내용
중처법 이행 준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처법 적용 준비 '완료되지 않았다'(94%) - 준비 미완료 답변 기업 중 87% : '남은 기간 내 준비완료 어렵다'
중처법 관련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미만 기업 지원 필요 사항 :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 등

- 경총은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강조
-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관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대재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 홍보에 주력
-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 12 반월공단 내 중소기업 사업주들과의 간담회에서 ① 사전준비의 어려움, ② 형사처벌 우려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현장 애로사항 확인
- 또한, 고용부는 12. 12 ①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 지원(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②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50인 미만 사업장)등이 포함된 '2024년중소기업 대상 산재예방 지원사업계획' 발표